

‘전기료 폭탄’ 원인은 누진제...451kWh 이상 쓰면 2.5배 ↑

4인가구 8월 1만8천원 올라 6단계→3단계 완화했지만 요금폭탄 논란은 계속될 듯

올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냉방기기 등의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각 가정에서 받아들고 지저서며 적힐 전기요금도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용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은 363kWh(킬로와트시)로, 이에 따른 전기요금은 6만3610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 전력사용량 333kWh, 전기요금 5만6090원보다 사용량은 9%, 전기요금은 13% 증가한 것이다.

한전의 이 같은 잠정 집계는 지난달 총 전력 사용량을 2500만가구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1~4인 등 가구원수별 평균 전력 사용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지난달 평균 전력 사용량은 전체 가구 평균인 363kWh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기요금 증가분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전기를 많이 쓴 데 따라 요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다만 쓴 것보다 더 많은 요금이 나오는 것은 한전이 적용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영향이 크다.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폭탄’ 우려가 커진 2016년 100kWh 구간별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200kWh 단위 구간별 3단

하계(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기본요금		
300kWh 이하	301~450kWh	450kWh 초과
가구당 910원	1,600원	7,300원
전력량 요금		
300kWh 이하	301~450kWh	450kWh 초과
kWh당 120원	214.6원	307.3원

연립뉴스 자료:한국전력

계로 개편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춘추계·동계와 하계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여름 기준으로 보면 처음 300kWh까지(1단계)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120원이다.

이후 301~450kWh(2단계) 요금은 kWh당 214.6원, 451kWh 이상(3단계)은 307.3원으로 댈다.

기본요금도 300kWh까지는 호당 910원, 301~450kWh는 1600원, 451kWh 이상은 7300원으로 오른다.

위로 갈수록 요금을 무겁게 매기는 것이다.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총조사 기준으로 평균 427kWh의 전기를 쓴 4인 가구가 올해 8월에는 누진제가 적용돼 약 1만8000원 오른 9만80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정부와 한전이 주택용 전기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추기 위해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제를 완화했지만, 누진제를 둘러싼 ‘요금 폭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문제 삼는 여론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한전에 제기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누진제는 전기 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해 도입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누진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며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의 누진제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전남대 배정환 교수 연구팀은 “(2016년) 누진제 완화와 (2018년) 누진 구간 확대로 냉방용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누진제 완화에도 큰 수요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정치권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물가와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누진제 일부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광구택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여름철 폭염으로 정부가 7~8월 하계 특별요금 구간을 적용 중이고 취약계층 전기료 등으로 약 7000억원을 지원 중인 하지만,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연립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립뉴스

대통령실 “2025 의대증원 유예, 현실적으로 불가능”

“2026년 이후 정원 제로베이스 논의...여야의정 협의체 여당이 주도” 복지부 장관 경질 요구엔 “인사권은 대통령 권한...교체 생각 안해”

대통령실은 9일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다”며 “오늘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여당이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

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 참여 없이 여야정 협의체를 우선 가동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의료계를 설득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당과 협의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의정 협의체 주체는 여당”이라며 “여당 대표께서 협의체를 제안했고, 협의체 발표나 형식, 구성 등 전반 내용에 대해서 여당에서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여야가, 의료계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

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 요구에는 “의료 개혁이 한창인 중에 개혁 책임을 맡고 있는 장관을 교체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서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급 상황 행동 요령을 당부하는 등의 종합 대책 브리핑을 이번 주중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의 응급실 방문에 대해서도 “과연이나 감시가 아니라 비서관실별로 적정 인원을 보내 감사와 격려를 하고, 현장 애로와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서관급 참모진을 응급의료 현장에 보내 현장의 건의 사항을 경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립뉴스

尹 국정수행 평가 긍정 29.9%·부정 66.1%

리얼미터 여론조사

국민의힘 34.6%, 민주당 40.1%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20% 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9.9%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0.6%p 내린 66.1%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서울(5.4%p ↓), 대전·세종·충청(2.0%p ↓)에서 국정 수행 지지도가 내렸고, 인천·경기(3.1%p ↑), 광주·전라(1.9%p ↑), 부산·울산

·경남(1.6%p ↑)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40대(2.4%p ↑), 70대 이상(1.6%p ↑), 30대(1.4%p ↑)에서 올랐고, 20대(5.0%p ↓)는 내렸다.

지난 5~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4.6%, 더불어민주당이 40.1%를 기록했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7.8%, 개혁신당 4.1%, 진보당 2.2% 등이었다. 무당층은 8.6%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립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제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